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12월 28일 목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江原日報

2023년 12월 27일 (수)

종합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권혁열(강릉) 도의장은 28일 오전 11시 강릉 사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사천면 이반장대회에 참석.

심영곤(삼척) 의회운영위원장은 28일 오후 2시 삼척 죽서루 경내에서 열리는 죽서루 국보 승격 기념행사에 참석.

엄윤순(인제) 도의회 농림수산부위원장은 28일 오전 10시 인제 한계2리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인제군 한계2리 대동회에 참석.

심오섭(강릉) 도의회 사회문화부위원장은 28일 오전 10시30분 강릉시 교1동 사무소에서 열리는 2023년 강릉시 교1동 통.반장대회에 참석.

홍성기(홍천) 도의원은 28일 오전 10시30분 홍천농업고등학교 태학관에서 열리는 홍천농업고등학교 제70회 졸업식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28일 (목)

종합 02면



제4회 강원인술대상 시상식이 27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김명선 도행정부지사,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허영 국회의원,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과 수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영

강원인술대상 '건강관리협 강원도지부' 대상

도·분지 총 5팀 수상자·기관 시상

강원도내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한 2023제4회 강원인술대상 시상식이 27일 개최됐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도민일보가 마련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강원

특별자치도교육청·한수원 한강수력 본부가 후원한 2023제4회 강원인술대상 시상식이 이날 춘천세종호텔에서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이영욱 도의원 (2023 강원인술대상 심사위원장), 허영 국회의원, 김창균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장,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등이 참

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본부장 박철호)가 대상을 차지했다. 보건직공무원 부문에서는 사정옥 춘천시보건소 주무관, 의료인부문에서는 강윤구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소아청소년과장과 손은진 한림대춘천성심병원 간호부장, 의료기관부문에서는 평창군보건의료원(원장 박건희)이 각각 수상했다.

김정호

▶ 관련기사4면

2023년 12월 27일 (수)

사회

江原日報

횡성 고(故) 최범하 전 면장 시비 제막



횡성 서원 매봉서원 시비 제막식이 27일 열렸다.



횡성 서원 매봉서원 시비 제막식이 27일 열렸다.



횡성 서원 매봉서원 시비 제막식이 27일 열렸다.

횡성 1950년대 고향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고(故) 최범하 전 서원면장을 기리는 시비(詩碑) 제막식이 열렸다.

서원면(면장:이해연)은 27일 매봉서원 앞에서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 김은숙, 백오인, 정운현 군의원, 마기성 횡성농협조합장, 지역기관, 단체장 등 내빈과 유족,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애향심을 기리는 제막식을 진행했다.

최 전 면장은 1950년 서원면장으로 부임해 서원면의 연혁과 현황을 정리하고 애향 시 집필, 서원면가 등을 담은 서원지를 편찬하는 등 행정 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했다.

이규삼 전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은 "최 전 면장이 보여준 애향심을 후손들이 이어받아 새로운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시도를 주민들이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28일 (목)

지역 11면



스마일 시민강사 수료식 2023 스마일 시민강사 수료식이 최근 강릉 세인트컨벤션웨딩에서 김준래 스마일강릉 이사장, 심오섭 도의원을 비롯한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3년 12월 28일 (목)

종합 01면



“수소산업 통해 강원 남부권 재도약”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비전 선포식’이 27일 강원대 삼척캠퍼스 그린에너지관에서 열려 이철규 국회의원,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박상수 삼척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김현영 강원대 총장, 정정순 삼척시 의장, 심영근 도의회 운영위원장,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허장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등 내빈들이 비전 선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삼척=권태명기자

2023년 12월 28일 (목)

江原日報

종합 01면

“미래 에너지 거점 동해·삼척 액화수소산업 메카 거듭나”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비전 선포식’ 열고 성공 기원

동해·삼척이 액화수소산업의 메카로 거듭난다.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과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삼척시는 27일 강원대 삼척캠퍼스에서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비전 선포식’을 갖고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의 성공을 기원하며 미래 전략과 비전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는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기념하고, 미래 수소경제 공급망 완성의 실행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철규 의원은 “비전 선포식은 동해·삼척이 액화수소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게 됐음을 선포하는 자리이자 수소라는 미래성장 동력을 통해 강원 남부권의 재도약을 선언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는 국내 수소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미래 신산업으로 동해와 삼척은 물론 강원 지역 경제에 막대한 효과를 창출해 낼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좋은 성과를 이룬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수소산업 발전에 필요한 여러 핵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

큼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상수 삼척시장은 “삼척은 강원도 수소산업의 첫발을 내딛은 곳으로 수소의 생산과 저장, 활용 등 수소산업의 전 주기 기반을 갖춰 나가고 있는 수소에너지 선도도시”라며 “앞으로 수소에너지를 통해 국가와 지역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클러스터 조성은 에너지원의 해외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자체 생산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수소 저장·운송 관련 핵심소재와 부품의 국산화를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은 동해와 삼척을 “위대한 에너지 유산을 갖고 있는 지역이자 미래 에너지의 거점이 될 지역”이라고 규정하며 “강원도가 수소저장 분야의 핵심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선포식에는 김현영 강원대 총장, 정정순 삼척시의장, 심영곤 도의회 운영위원장, 심영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허장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기업 관계자,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원선영·황만진·전명록기자가

江原日報

2023년 12월 27일 (수)

사회

[포토뉴스] 화천군 새마을지도자대회



2023 화천군 새마을지도자대회가 27일 군여성회관에서 최문순 군수, 노이업 군의장, 박대현 도의원, 나병학 군새마을회장, 이화원 군노인회장, 송호관 군체육회장, 김영준 자유총연맹강원자치도연합회장, 최희석 군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새마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3 화천군 새마을지도자대회가 27일 군여성회관에서 최문순 군수, 노이업 군의장, 박대현 도의원, 나병학 군새마을회장, 이화원 군노인회장, 송호관 군체육회장, 김영준 자유총연맹강원자치도연합회장, 최희석 군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새마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3 화천군 새마을지도자대회가 27일 군여성회관에서 최문순 군수, 노이업 군의장, 박대현 도의원, 나병학 군새마을회장, 이화원 군노인회장, 송호관 군체육회장, 김영준 자유총연맹강원자치도연합회장, 최희석 군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새마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28일 (목)

경제 06면

강원 임금도 낮는데 ‘워라밸’ 점수까지 쏠쏠

<일·생활 균형>

강원 50.9점 5년간 순위 지속 하락
일·제도·지자체 관심도 최하위권
관련 조례 미흡 변화 필요성 대두

지난해 강원지역 일과 생활의 균형 수준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3년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시·도의 일과 생활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 강원지역은 50.9점으로 전년(48.9점) 대비 2점을 올렸으나 순위는 15위에서 17위로 하락, 전국 꼴찌의 불명예를 안았다. 전국 평균(58.7점)보다 7.8점 낮았고, 전국 1위인 서울(64.8점)과 비교해 13.9점이나 적었다. 서울의 경우 전국 가장 높은 수준의 남성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과 총 근로시간, 유연근무 도입률·이용률 등에서 상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 5년간 강원지역의 일과 생활 균형 지수는 5년 만에 순위가 10위나 떨어졌다.

2018년 49.7점으로 7위, 중위권에 속했으나 2019년 48.4점(12위), 2020년 47점(17위)으로 전국 최하위로 추락한 후 최근 3년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세부 영역별 결과를 보면 강원지역은 일 영역에서 12.4점으로 전국 17위, 제도 영역 15점으로 15위, 지자체 관심도 영역도 7.2점으로 17위에 위치 4개 영역 중 3개 영역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생활 영역도 16.3점으로 전국 평균(16.4점)을 하회했다.

게다가 지난해 강원지역 근로소득 연말정산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

액은 3652만원으로 제주(3565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서울(4916만원)과 비교하면 1264만원이나 낮은 임금 격차도 심한데다 일과 생활 균형도 전국 최하위이기에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관계자는 “강원지역의 경우 관련 조례 제정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약하다 보니 점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지정에서도 요구는 하고 있으나 도를 중심으로 변화가 있어야 일과 생활 균형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우진

江原日報

2023년 12월 28일 (목)

종합 01면

시외버스 노선 5개 중 1개 폐지... 멈춰선 '서민의 발'

코로나로 급감한 승객·기사 수 회복 안돼... 운행 40% 감축
도민들 불편 가중... 업계 "공공성 감안 지원대책 마련 시급"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시외버스가 멈춰 설 위기에 놓였다. 코로나19 이후 승객과 기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운행되던 노선 5개 중 1개는 사라졌고 터미널 사업자도 위청이고 있다.

강원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

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라진 도내 시외버스 노선은 68개에 달한다. 2019년 12월 414개이던 노선이 27일 기준 346개로 줄었다. 운행횟수로 따져보면 감축 규모는 더욱 크다. 12월 기준으로 2019년 하루 1,569건이던 도내 시외버스 운행횟수는 불

과 4년 만인 올해 932건으로 줄었다. 최근 4년 사이 전체 노선의 16.4%가 운영을 중단했고, 살아남은 노선들조차 대부분 운행횟수를 줄인 셈이다. 폐지·감화된 노선 중에는 원주~동서울, 춘천~동서울, 강릉~동서울, 강릉~부산 등 핵심 도시 연결 주요 노선도 적지 않았다.

노선 운영 규모가 축소된 주요 이유는 승객 감소에 따른 수익 급감이

다. 올해 도내 시외버스 수송인원은 792만7,049명으로 2019년(1,278만1,284명)보다 38% 감소했다. 승객이 줄며 운송수입은 151억4,195만원에서 110억9,209만원으로 27% 줄었다. 코로나19 기간 택배, 배달업 등으로 직종을 전환한 버스기사들이 복귀하지 않는 점도 노선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 도내 시외버스 기사 수는 2019년 900명에서 올

해 526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상황이 이렇자 '터미널 폐업'도 가시화되고 있다.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적으로 터미널 15곳이 문을 닫았다. 도내에선 2021년 원주고속터미널이 경영 악화로 시외버스터미널과 통합됐다. 김현아기자

2면에 계속

江原日報

2023년 12월 28일 (목)

종합 02면

시외버스 노선 5개 중 1개 폐지
멈춰선 '서민의 발'

-1면에서 계속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27일 춘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만난 인제군 거주 70대 김모씨는 "하루에 네 번은 다니던 인제~춘천 버스가 이제는 이른 아침에 두 대밖에 없다"며 "운행 간격이 길어져 병원에 올 때마다 두세시간은 터미널에서 기다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생 오모(20대)씨는 "고향인 아산과 춘천을 연결하는 직통버스가 코로나19 이후 사라져 매번 버스를 갈아타야 한다"고 푸념했다.

버스업계는 시외버스 운행의 공공성이 큰 만큼, 지자체 차원의 특단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전인혁 도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는 "올해 전국 8개 도의 시외버스 운송적자 지원율이 72%를 기록한 반면, 강원도는 57%에 그쳤다"며 "교통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지자체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했다.



◇강원형 늘봄학교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이 27일 강원특별자치도청 본관회의실에서 열려 김진태 도지사, 신경호 도교육감,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등 참석자들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어르신 일자리 통해 초등생 돌봄 지원

道-도교육청-한국노인인력개발원 늘봄학교 지원 업무협약
내년부터 춘천·원주·강릉·동해·속초 158개교 시범 운영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늘봄학교 사업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협력한다. 도는 2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김진태 지사, 신경호 교육감,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형 늘봄학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형 늘봄학교 지원사업은 어르신 일자리를 통해 어린이 돌봄서비스를 내실화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내년

시범 사업 성과를 분석해 2025년도에는 도내 18개 시·군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양질의 맞춤형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미래형 인재 양성과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에 이바지하겠다”며 “지역사회와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학교 업무 경감을 통해 늘봄학교에 대한 현장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강원형 늘봄학교 사업은 강원자치

도의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학교에 필요한 돌봄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늘봄학교 보조 인력 채용과 도비를 지원하고, 늘봄학교 운영 주체인 도교육청은 사업 계획 수립 및 행정 지원 역할을 맡는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 매뉴얼 제작을 지원한다.

늘봄학교 인력은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60세 이상 도내 거주자로 도내 초·중고에서 방과후학교 및 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도는 내년 시범으로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등 5개 시 158개교에 늘봄학교 인력 632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江原日報

2023년 12월 28일 (목)

종합 02면

1조원대 기업혁신파크 발표 해 넘긴다

속보=당초 연말 발표될 예정이었던 춘천 기업도시(기업혁신파크) 지정 여부(본보 지난 26일자 1면 보도)가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됐다. 춘천을 비롯해 지역 간 경쟁이 과열되자 여야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법 개정 자체를 미루며 장기간 공전이 불가피해졌다.

기업도시 시즌2로 불리는 기업혁신파크는 27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후보지가 발표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27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상정 자체가 보

춘천 포함 전국 7개 지자체 과열 경쟁, 탈락 지역 선거 영향 우려
국회 법사위 상정 보류 총선 이후로 연기... 내년 상반기도 불투명

류됐다.

춘천을 비롯해 경북 포항, 충남 당진, 아산, 경남 거제, 전남 순천, 담양 등 7개 지자체가 뛰어들면서 탈락 지역의 경우 내년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여야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 자체를 선거 이후로 미루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현지 실사 및 심사까지 모두

마친 상태지만 국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연내는 물론 내년 상반기 중 발표도 불투명해졌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를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에 맞게 재편한 모델로 인센티브는 유지하고 개발 조건과 규제는 완화해 신속한 개발과 투자를 유도하는 제도다. 지정 시 기업맞춤형 신도시가 조성되고 창업기업 법인세 100%, 이전 기업 50% 면

제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다만 변경된 개발 조건 등이 담긴 특별법 개정 없이는 지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춘천시는 기업혁신파크로 지정되면 더존비즈온, 신한은행과 함께 남산면 광관리 산 68번지 일원 368만㎡에 9,364억원을 투입해 디지털시티, 개방형 산학협력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춘천시와 더존비즈온이 이미 전국적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정밀의료, 바이오, IT 및 데이터산업을 집적화한 첨단도시를 구현한다.

최기영·정윤호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28일 (목)

사회 05면

이상고온 탓 매년 200만명 찾는 강원 겨울축제 '적신호'

인제빙어축제 결빙 안돼 취소

6개 축제 경제효과 2162억원 불구

장소 한정·날씨 등 한계점 드러나

한 겨울에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장대비가 쏟아지는 등 이상기후 탓에 올해 인제빙어축제가 취소됐다. 강원도의 겨울먹거리인 겨울축제들마저 이상기후로 매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주요 겨울축제는 화천 산천어축제, 인제 빙어축제, 평창 송어축제, 태백산 눈축제, 홍천강 썰매축제, 대관령 눈꽃축제 등 6개다.

최근 대부분의 축제들이 겨울 축제



준비기간에 들어서면 '이상 고온'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지만 겨울 축제의 막대한 경제유발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은행강원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화천 산천어축제(131만명)와 평창송어축제(40만명) 등 강원도 주요 겨울축제에는 관광객 200만명 이상이 찾아 2162억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문제는 얼음과 눈 등 기후적

특성에 기반 축제 방식이 최근 이상기후와 맞물리면서 축제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갈피가 잡히지 않는 겨울 날씨도 문제다. 기상청에 따르면 철원의 경우 지난 2003년 겨울 평균 최고기온은 지난 2003년 -3도 수준이었는데, 2012년 -1도로 오른 이후 2019년에는 5도까지 치솟는 등 오락가락한 겨울 날씨로 축제 운영도 매년 뒤죽박죽이다.

이상 고온에 이어 올해는 때아닌겨

울비까지 내렸다. 지난 11일 강원도는 1999년 특보 관련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된 이후 25년간 처음으로 12월에 호우특보가 발표되면서 영동과 북부 산지를 중심으로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졌다.

결국 인제군은 내년 1월 19~28일 인제군 남면 부평리 소양강댐 상류 빙어호 일원에서 빙어축제를 열 예정이었지만 소양강댐 수위로 인해 행사장 조성 및 결빙에 어려움이 있어 취소하기로 했다.

겨울축제가 이상고온에 휘청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홍천강 썰매축제에서는 빙판이 얼지 않아 물에 떠 있는 '플라스틱 부교'와 실내 낚시터에서 축제를 운영하기도 했

다. 지난 2017년 화천 산천어축제는 개막을 앞두고 이틀간 쏟아진 60mm의 폭우에 축제장 얼음이 녹아 일주일 연기되는 등 도내 겨울축제는 매년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는 만큼 '축제의 방향성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영심 강원연구원 박사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친환경 등 장기적인 측면을 바라봐야 할 것"이라며 "얼음이 얼지 않아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만큼 축제를 하천변 등 특정 장소에 한정하지 말고 마을 전체로 확산하는 방안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재훈 ericjh@kado.net

▶관련기사 13면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28일 (목)

사설/칼럼 17면

산불용 헬기 임차 국비 지원 마땅

-산불대형화양상, 국가적 재난예방대책 필요

지난 수년 동안 발생한 동해안 산불은 점차 대형화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공공시설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큰 타격을 줍니다. 올봄 강릉 경포 일대를 덮친 대형산불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15개 분야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동해안 지역 산불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깁니다. 국가 재난 수준의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형산불에 대비한 정부의 관련 예산 편성은 기대에 못 미칩니다. 특히 헬기 임차 관련 내년 예산에 진화 헬기 임차 비용을 반영하지 않았습니

다. 산발 발생 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과 진화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대형산불 발생 시 강원특별자치도와 각 시·군은 헬기 임차 비용을 100% 부담해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당장 2024년도 봄철 대형산불에 대비하기 위한 헬기 8대 임차 비용으로 79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헬기 임차 비용 75억 원과 비교하면 4억 8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헬기 임차료가 증가한 것은 강풍에 취약한 소형 헬기를 중대형으로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는 산불이 점차

대형화하며 국가 재난으로 커지는 데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화 헬기 지원 비용을 국비로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국비 지원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불 진화당국인 산림청은 강원도의 요구에 공감했으나, 기재부는 긴급재정 기조와 산불 진화는 지자체 소관이라는 이유 등으로 국비 지원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내 지자체는 국가적 재난 사무에 대해선 국비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가적인 재난은 정부 차원에서 예방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기존의 소형 헬기로는 봄철 강원도 동해안 강풍에 맞서 원활한 진화 활동을 펼치기 힘들어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제때 진화를 못해 발만 구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대형산불 발생 후 복구비는 진화 헬기 운영비의 수십 배가 더 들 수 있습니다. 재난 상황 일어난 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지원하는 일은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재정이 더 악화해 운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산불 대비 체계에 허점이 드러날 것입니다. 긴급재정에 따른 정부의 애로가 있겠지만, 추후에라도 헬기 운영 예산을 지원해야 마땅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28일 (목)

사설/칼럼 17면

제2경춘국도 지연 안된다

-사업비 늘어 적정성 재검토가능성... 표류 우려

국가균형프로젝트로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받은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이 5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첫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50% 이상 늘어 장기 표류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중앙부처의 협의 결과에 따라 내년 1월 착공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춘천 등 강원 영서 북부권과 수도권 간의 접근성을 개선할 이 사업을 지연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 지역 여론입니다.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비용 부담이 늘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사업을 지체하지 말고 착공을 서둘러야 합니다.

제2경춘국도 건설공사는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 분기점~가평군 청평면과 가평읍~춘천시 서면 당림리까지 33.6km를 잇는 왕복 4차로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개통 시 수도권과 강원권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기존 국도 46호선을 이용할 경우 50분대에 이르는 소요 시간이, 25분 정도로 단축됩니다. 서울~춘천 고속도로 상승 지·정체 해소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2경춘국도 이용객들이 춘천 도심 혼잡 구간 진입 없이 빠르게 춘천 서면과 북부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철원, 화천, 양구 방면으로의 진출도 용이합니다.

현재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은 연내 실시설계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노선안에 대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물가 상승과 사업 지연 등에 따라 총사업비가 크게 증액될 전망이어서 내년 초 착공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제2경춘국도 건설공사 사업비는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안에서 당초 1조 845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러나 사업 장기화와 물가 상승으로 총사업비는 올해 실시설계 기준 1조 7000여억원으로 약 56% 증가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열리는 중앙부처의 총사업비 협의는 사업의 항배와 착공 시기를 가늠하게 합니다.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에서 사업 적정성 재검토 조치를 내리면 타당성 재조사에 준하는 국책 연구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해 절차에만 최소 9개월~1년이 소요됩니다. 정부는 협의와 착공 등 일정을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은 강원 영서 북부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이며,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도 개선합니다. 나아가 침체한 접경지 발전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조기 착공에 주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추진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江原日報

2023년 12월 28일 (목)

사설/칼럼 19면

근로방식·시간, 시대 변화 맞추어 대폭 개선을

한 주에 일한 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하루 이틀 밤샘 근무를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최근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경영계와 노동계 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경영계는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해질 수 있어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노동계는 “노동자 건강권이 침해받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다. 여기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해 주당 총 52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지만 그동안 주 단위가 아닌 일일 8시간을 넘기는 것이 법 위반인지 여부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연장 근로를 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첫 결정이다. 주 52시간제는

장시간 노동의 폐해를 줄이려는 취지로 2018년 도입됐다. 일과 휴식의 균형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이 더해져 근로시간 단축에 일정 부분 효과를 본 것은 사실이나 업종, 근무 형태를 가리지 않는 획일적이고 경직된 규제 탓에 산업 현장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연장 근로를 더 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근로자들은 경제적 손실을 호소했고, 특정 기간에 일감이 몰리는 정보기술(IT) 업체나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의 고통도 컸다. 여기에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재택·원격근무의 필요성이 확대됐다. 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각종 스마트기기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분명한 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생산성 제고라는 시대적 요청과 더불어 근로방식·시간은 이제 시대 변화에 맞게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경직된 근로시간은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범 중 하나로 꼽혀 왔기 때문이다. 관건은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느냐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국제기준으로 보면 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급격한 노동시간 유연화는 노동계의 주장대로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일방 통행식 연공형 임금체계 개

편은 문제 있다는 견해도 일견 타당하다.

변화하는 근로 환경에 따른 제도 개선 요구와 이해 당사자인 노동계의 반발 사이에서 정부가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대법원, ‘연장 근로 주 단위로 계산’ 판결

획일적이고 경직된 근무 형태 변화 줘야

일할 시간과 조건을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 때

대화가 필수다. 유연근무제가 확산되는 등 파격적인 근무 형태가 나타나는 등 격변의 시기에 과거의 노동집약적인 산업화 시대에 맞춘 제도를 고수하는 것은 경영계나 노동계 모두에게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

즉, 기업이나 사업장에 가장 적합한 근무방식은 무엇인지 고민해 나가야 할 때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근로시간을 일도양단식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폭넓게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생산성을 높여 나갈 수 있다. 다만 주 52시간제 개편을 악용해 저임금으로 장기간 노동을 시키거나 근로자의 건강을 도외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이 뒤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할 시간과 조건을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 한다.

江原日報

2023년 12월 28일 (목)

사설/칼럼 19면

탄광 문 닫는 태백·삼척, 고용위기지역 지정돼야

태백고용노동지청이 2024년 6월 장성광업소, 2025년 6월 도계광업소 폐광을 앞두고 있는 태백과 삼척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동의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1차로 지역고용노동청의 검토 및 협의를 거친 후 광역지자체의 노사민정협의회 심의·의결을 통과해야만 정부(고용노동부)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이 완료되면 정부는 조사단을 꾸려 현장 실시를 벌여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고용위기 지역을 위한 1차 관문을 넘으면서 폐광 대응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실업자 생활안정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문제가 공론의 장으로 나온 만큼 정부는 최대한 빨리 법적 검토 및 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지정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고용은 물론 경제지표, 지역사회 분위기 등에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폐광지역인 만큼 적기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태백과 삼척은 대표적인 폐광지역이다. 대한민국 발전의 전초기지였지만 안타깝게도 1980년대 후반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이후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1995년)'이 제정된 지 30년이 돼 가지만 아직

도 침체의 늪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소멸의 위기까지 맞고 있다. 도가 실시한 '탄광지역 폐광대응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태백 장성광업소 폐광 시 피해 규모는 3조3,000억원,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 시 피해 규모는 5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태백 지역내총생산(GRDP)의 13.6%, 삼척은 9.6%다. 또 태백 876명(장성동 722명), 삼척 1,685명(도계읍 1,603명)의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직 이렇다 할 대체산업이 없는 태백과 삼척의 시민들은 이대로라면 심각한 고용위기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폐광으로 시작된 불황이 지역 전체를 잠식하고 있는 태백·삼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경제난에 취업난까지 더해지면 지역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폐광지역의 절박함을 귀담아들어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이외에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고 종합취업 지원 대책을 세워 실업 예방·고용 촉진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 주민들이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란다.